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의 현황과 과제

함 석 동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 과장

누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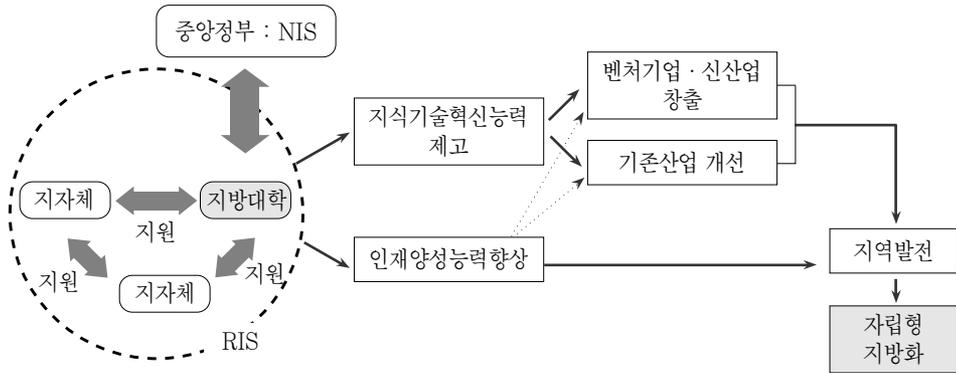
I. 누리사업 현황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은 참여정부가 최고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사업 중 최초로 실행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비전 아래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등이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장 적응력 있는 우수 인력 양성 및 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 학생 유치와 졸업생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전국 지방대학의 112개의 우수 사업단(대형 25개, 중형25개, 소형 62개)을 선정하여 동 년도에 2,200억 원을 지원하였고 동 사업단은 연차평가 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5년간 계속 지원을 받으며, 향후 선정될 신규 사업단을 포

함, 2005년 2,400억 원, 2006년, 2007년 3,000억 원, 2008년 3,400억 원씩 총 1조 4,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추진 체계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각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검토 및 추천을 거쳐 추천 사업단을 대상으로 중앙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누리사업은 신청 사업 분야의 제한 없이 전문대학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에서 지역발전 전략을 토대로 지방 대학별 특성화 분야에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교육의 질 향상,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우수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즉, 각 사업단은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개선·운영 계획, 산학협력 프로그램,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성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단 참여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200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림 1) 지역혁신체계에서 지방대학의 역할

학부(또는 학과, 전공)는 5년간의 집중투자와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육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졸업생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즉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공급을 이루어 지역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2004년도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총 454개 사업단 중 전략산업과 관련된 신청 사업단은 165개이며 이중 50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지역 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형사업은 기계·자동차 분야 6개, IT분야 7개, BT분야 4개, NT분야 4개, CT분야 3개, 물류 분야 1개로 25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으며 중형사업에서는 메카트로닉스 분야 등 10개 사업단, 소형사업에서 섬유, 홈네트워크 등 15개 사업단이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신청·선정되었다. 2004년에 선정된 사업단은 정부

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을 위해 이미 지정한 6개 시범단지 중 수도권을 제외한 5개 단지의 전략산업과도 일치하고 있어, 해당 산업 필요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 외에 관광, 디자인, 의료, 환경, 복지, 해양, 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에 바탕을 둔 교육프로그램들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에서 지방대학은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산업체, 연구소 등 각 부문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학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5학년도 입학정원을 총 7,271명(대학 4,073명, 전문대학 3,198명)을 감축하였으며, 교육여건 개선의무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 즉,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은 대학전체의 신입생을 매년 60% 이상, 교원도 2008년까지 6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과·학

〈표 1〉 지역전략산업 분야별 신청 및 선정사업단 수

구분	전략산업 분야 및 선정사업단 수				계
부산광역시	항만물류 (3→1)	기계부품소재 (7→0)	관광컨벤션 (6→0)	영상·IT (7→3)	23→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메커트로닉스 (2→1)	전자정보기기 (6→4)	섬유 (3→1)	※ '전자정보기기' 및 '생물' 분야는 대구/경북 중복	23→11
	신소재 (1→1)	문화관광 (4→2)	생물·한방 (7→2)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산업 (1→1)	디지털전자정보 (2→2)	첨단부품/소재 (1→1)	문화 (5→2)	21→8
	생물 (5→0)	신소재 (1→0)	조선 (1→1)	관광 (5→1)	
대전광역시	정보통신 (4→1)	바이오 (4→0)	차세대전지 (0→0)	메커트로닉스 (5→0)	13→1
울산광역시	자동차 (1→1)	조선해양 (1→1)	정밀화학 (1→1)	환경 (1→0)	4→3
충청북도	바이오 (4→2)	전자정보 (8→2)	반도체 (0→0)	2차전지 (0→0)	12→4
충청남도	전자·정보기기 (9→2)	자동차·자동차부품 (2→2)	첨단문화 (9→1)	관광 (4→0)	24→5
강원도	바이오 (3→2)	의료기기 (2→1)	관광문화 (8→2)	신소재 (1→1)	14→6
전라북도	자동차부품/기계 (4→1)	방사선기반생명 (3→0)	대체에너지 (1→0)	전통문화관광 (8→2)	16→3
경상남도	기계 (2→1)	로봇 (1→1)	홈네트워크 (4→1)	생명공학 (5→0)	12→3
제주도	관광 (1→1)	건강뷰티·생물 (0→0)	친환경농업생명 (2→1)	디지털컨텐츠 (0→0)	3→2
합 계					165→50

부는 신입생을 매년 90% 이상 채워야 하고, 사업기간 동안 교원을 80% 이상 확보해야 하고, 졸업생 취업률도 70%까지 개선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2005년에는 예산 증액분 200억 원에 대하여 대형 3, 중형 2, 소형 2 등 총 7개 사업단이 추가 선정되며 사업 참여 조건을 교원 확보율 56%(04년 50%), 신입생 충원율 80%(04

년 60%)로 강화하였다.

II. 기대 효과

누리사업 선정사업단의 사업계획대로 누리사업이 추진되면 누리사업 참여대학 및 사업단의 학생 충원율이 높아지고 특히 지역 내 우수인력 유입이 확대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

〈표 2〉 2004년 누리사업 선정 결과

구분		계	대형	중형	중형
사업단 수		112	25	25	62
연간지원액		2,135억 원	1,032억 원	604억 원	499억 원
사업단별 평균 지원액(백만 원)		1,906	4,128	2,414	805
참여 기관	대학(협력포함)	113교(중복 제외)	79교	55교	66교
	기타 협력기관	1,000개(일부 중복)	388개	290개	322개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또한 참여대학과 지역산업체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참여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및 지역산업체 유입비율이 높아지고 지역산업 발전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단 내에서는 대학내 학과간 연계 협력, 대학간 교류 협력이 활발히 나타날 것이며, 참여 대학들은 특성화 분야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시키게 되어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누리사업 참여대학과 경쟁하기 위하여 지역내 타 대학들도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누리사업 참여대학과 사업단의 성과가 지방대학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경제 측면에서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대학이 지역산업의 R&D 기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높아지면 문화 및 복지서비스도 확충되어 지역사회 경제에 대한 만족도 내지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역의 자생적, 지속적 발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대학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정착과 상생발전으로 지방의 자생력이 확보되고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이 촉진되며, 지역인적자원개발(RHRD)과 지역혁신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강화 및 경험 축적, 혁신역량 강화 등을 기반으로 지역여건 및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Ⅲ. 향후 과제

누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첫째, 누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서 정성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단별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상의 자체 성과지표 등 사업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원 충원율이라면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충원 여부, 취업률은 취업의 질(상용직 여부,

지역내 취업 여부)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학협력과 교과과정 개편은 그 중요성을 감안, 해당 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면밀히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산학협력실적은 기업임직원의 교수 혹은 겸임교수 채용, 교수의 기업 파견,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실적, 기업재직 근로자의 재교육 실적, 창업이나 사업지원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에 기업 참여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매해 사업 연도 종료 전에 지역산업체 및 졸업생에 대한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당해연도 결과 및 그에 대한 대응, 연도별 만족도 증감 추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둘째, 누리사업 선정사업단이 계획대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선정사업단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연차평가지 장기적 차원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선정 후 현장 점검을 통하여 1개 사업단을 탈락 처리하였고 66개 사업단에 대한 '경고' 조치로 정부의 철저한 사업관리 의지를 인식시킨 바 있다. 일관되고 엄정한 정부의 사업 관리와 더불어 연차평가지 평가팀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대상 사업단에 대해 세부적이고 집중적인 평가 작업을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잘못에 대한 단기적 처방 차원의 제재 자체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사업단이 계획서에서 제시한 필수사업지표 및 기타 자체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 형식의 컨설팅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누리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분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 투자의 정

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NURI 사업도 사업 중간 시점에 지방대학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업투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체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혁신 사업간 중복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공동평가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단별 누리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과, 평가자료 등을 DB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의 투명성 제고, 평가 결과의 검증과 평가지표의 개선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성과 확산측면에서 본다면 정례적인 누리사업 성과 발표회를 통하여 동료평가(peer review)가 가능하도록 하고 우수사례의 선정과 포상을 통하여 다른 사업단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함석동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기도 교육청 교직과 학사계장, 교육부 교육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교육부 조정1과 사무관,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대학정책과 서기관,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냈고,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